



국회로 모여든 시민들

지난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집회에 참석한 국민들로
 팍 차있다. /뉴스

특수본 “尹 대통령, 절차상 피의자”

박세현 특수본부장 브리핑
 김용현 전 장관 수사 본격화
 “지위고하 막론하고 엄정 수사”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세현 특수본부장이 8일 “어떠한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특수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적인 중대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특수본은 지난 6일 검사 20명, 수사관 30명으로 출범했다. 전날 군검사 등 12명을 추가로 파견받아 군검찰과 합동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새벽 1시30분께 자진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약 6시간 넘는 심야 조사 후 긴급체포됐다. 현재는 동부구치소로 이송된 상태며, 검찰은 이날 오후 다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박 특수본부장은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 중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각 단계에서 어떤 입장인지는 다 알려진 상황”이라며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파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전 장관) 진술 확보를 위해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

지속적으로 조율했다. 그러던 중 오늘 새벽에 본인이 자진 출석했고, 수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이 검찰 조사 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교체했다면 경위와 이유를 확인해서 관련 수사에 반영할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 비상계엄을 발표한 윤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절차상으로는 (피의자가) 맞다”며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이 내란죄 수사를 두고 이견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

련된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경찰에 합동수사본부(합수본) 구성을 제안했지만, 경찰에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지난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당시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국정원이 가지고 있던 대공수사권도 지난 2020년 경찰로 이관된 후 올해부터 시행된 만큼 사실상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에서는 내란죄가 직접 수사 범위는 아니지만, 자신들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직권남용죄와 직접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규훈 기자·뉴스 ch9720@metroseoul.co.kr

與野도 반발… “논의 필요” vs “수사 대상”

(與)

(野)

>> 1면 ‘한동훈·한덕수 대국민’서 계속

국민의힘 “의원총회 등 의견 수렴”
 민주당 “위헌통치 허용되지 않아”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예산이 확정돼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에 민생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정을 주도할 권한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도대체 어떤 법적 근거로 한 대표가 국정 정상화를 주도하나”라며 “한 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를 권력 장악의 기회로 여기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미 국민의힘의 한 친윤계 의원은 윤석열이 당에 권한을 위임했지 한동훈 대표에게 위임한 것이 아니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 수사해야 한다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상계엄 사태의 ‘수사 대상’일 뿐, 국정운영을 주도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정국 수습방안을 발표한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도 “국정운영의 중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란사태의 신속하고 근본적인 종결을 위한 민주당의 입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

이 될 수 없다”며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책임총리제 윤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 상태로 끌고가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이라며 “윤석열-한동훈-한덕수가 합의한다고 일본 일초의 위헌통치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한 총리를 두고 ‘내란의 즉각적 수사대상’이라며 “계엄법에 따라 총리를 거쳐 계엄발동이 건의되었거나, 국무회의에서 계엄령발동에 찬성했다면 중요한 내란가담자”라고 규정지었다.

김 최고위원은 “예측불허의 후속사태를 막기 위해 윤석열의 즉각적인 군통수권박탈, 김용현뿐 아니라 여인형을 비롯해 1차계엄에 동원된 핵심 지휘관의 즉각 구속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내란기획 및 협조세력의 규모, 실제, 소재 등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밖에 “윤석열은 직무정지 이전이라도 연금하고 일체의 자료접근을 금지해야 한다. 김건희 또한 마찬가지로”라며 “대통령실 내의 윤석열·김건희 직속세력 또한 모두 신병확보, 자료접근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12·3 윤석열내란대책위원회’ 기구 구성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여론 내에서도 한덕수·한동훈 공동담화문은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친윤(친윤석열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대통령께서 국정 안정화 방안을 당에 일임한 것은 당 최고위원회, 의원총회, 또 여러 원로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의미”라며 “대통령의 직무배제, 질서있는 조기 퇴진 등의 방안 역시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사안이 엄중할수록 당의 의사결정 기구와 당원,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레아만 지금의 위기를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의 발언은 한 대표의 ‘질서있는 퇴진론’이 당의 논의과정이 결여돼 당내 지지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서예진·박태홍 기자syj@